

첫 임사회 장소·의장단·상임위 등 쟁점 '교통정리' 주목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준비 본격화

내일 영암에서 당선자 첫 공식 간담회 운영 체계·조직 구성 등 핵심현안 논의 내달 1일 의장 선출·필수조례 처리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7월1일 출범 준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첫 임사회 개최 장소와 의장단 선출, 상임위 구성 등 쟁점들에 대한 사전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자들이 9일 영암에서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핵심 현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

이다.

7일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자 91명은 9일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간담회를 열어 특별시의회 운영 체계와 조직 구성 등 현안을 논의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안건은 통합특별시의회 첫 임사회 개최 장소를 결정하는 문제다. 7월1일 오전 7시 첫 임사회를 열어 의장 선출과 회기 결정, 필수 조례안 처리 등을 오전 8시30분까지 마쳐야 한다. 의회가 통합 필수 조례를 의결해야 같은 날 오전 9시 공표·시행 절차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가운데 어느 곳을 첫 본회의장으로 활용할지 확정해야 전자투표 시스템, 방송·음향 설비 점검 등 임사회 준비를

마칠 수 있다. 출범 초기 운영을 위한 한시적 결정인 만큼 광주·전남 양 지역 시의원들간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대 통합특별시의회를 이끌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선출 절차도 논의된다. 광주와 전남 의원 간 안배, 대선 의원 중심 선출 여부, 정당별 배분 방식 등이 핵심 변수다.

상임위원회 개편도 핵심 안건 중 하나다. 현재 전남도의회는 8개, 광주시의회는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자치권 강화·균형발전 통합 원칙에 따라 기존 전문성·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체계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검토안으로는 14개 위원회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원 7-8명을 12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배치하고, 운영 위원회와 예결특위를 별도 운영하는 방식이다.

각 상임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각각 분산 배치될 공간이 크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전남도의회는 의원 6명 이상, 광주시의회는 4명 이상을 교섭단체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합 자치법규 정비 방안 역시 선결 과제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6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480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97건 등 대규모 조례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조례 가운데 폐지 대

상 조례를 통합 출범 필수 조례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쏠리 여부를 따져봐야 할 조례까지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 조례를 우선 처리하는 대신, 폐지·정비 대상 조례는 후속 심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토되고 있다.

양 시·도의회 관계자는 "차질없는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서는 사전에 조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9일 당선자 간담회를 통해 통합의회 운영 방향의 큰 흐름을 잡아야 하는 만큼 당선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민형배 당선자 인수위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 첫 상견례

특별시 출범 준비 착수...오늘 현판식

현판식 "지역 주도 성장모델 실현 출발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이하 대전환기획위)가 7일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대전환기획위는 이날 오후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민 당선자와 정은승 위원장(전 삼성전자 사장), 백승주 부위원장(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인수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민 당선자는 위원들에게 "전남광주 통합은 지난 40년의 분절과 불균형을 넘어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시작하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오랫동안 이어진 지역의 아픔과 한계를 넘어 전남광주 하나가 공동체로 다시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당선자는 "통합특별시는 이재명 정부의 5대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선도할 지역 주도 성장모델이 되어 한다"며 "성장, 균형, 기본 사회, 기본소득, 녹색전환, 시민주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특별시를 만들고 모든 권한과 책임이 시민에게 있다는 원칙 아래 새로운 특별시를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승 인수위원장은 "민 당선자의 성장 비전에 공감해 참여를 결심했다"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과 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에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특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7일 오후 나주시 빛가람동 복합문화체육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형배 당선자 측 제공>

성장해 온 산업 현장의 DNA를 위원들과 함께 나누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주권·산업경제·과학기술·도시공간·문화관광·보건복지 등 6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포함한 7개 분과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환기획위는 공식 활동 기한인 7월20일까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환기획위는 8일 오전 10시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안 점검을 시작으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통합특별시 행정 공백 최소화 방안 점검

전남도는 지난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7차 주요 통합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실·국장이 참석해 소관 업무별 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통합, 안내표지판 정비 등 출범 전 완료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

전남도는 도로·하천 등 생활 밀접 안내표지판 정비를 진행 중이며 각종 행정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전환 프로그램 개발과 모의훈련도 준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9일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7월1일 출범일 당일 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필수 조례 480건을 사전 설명할 계획이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무엇보다 통합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대민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중단되면 중단 기간과 대체 수단을 사전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강기정 시장, 12일까지 중국 순방 역사·AI·미래산업분야 협력 강화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이 역사·문화 교류와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협력 강화를 위해 7일부터 12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 베이징, 우한을 방문한다.

대표단은 왕허성(王赫生) 하얼빈 시장을 만나 정율성과 안중근이라는 한·중 공동의 항일 역사인물을 재조명하고 민주·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상호 문화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베이징에서는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제 여사를 만난다. 중국 인민음악의 대부로 존경받는 정율성 선생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예술적 유산을 계승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 120년 역사를 간직한 베이징동물원 '판다관'을 방문해 중국의 자부심이자 국가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이언트 판다를 통한 생태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도시브랜드 제고 사례를 배운다.

광주시 우호협력도시인 우한에서는 샤오미 스마트공장의 무인 자동화 공정과 휴머노이드 로봇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제조혁신과 로봇 상용화 생태계를 살펴보고 광주 AI 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강기정 시장은 "역사(정율성)·생태(동물원)·기술(AI·로봇)을 아우르는 복합 외교의 출발점으로 삼아 문화적 공감대를 산업적 실리로 연결해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중국의 혁신 정책과 산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광주 핵심 현안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교통공단

신고전화 1332
꼭번없이

자동차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기간
26.3.25. (수) ~ 10.31. (토)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원
병의원 관계자 5,000만원 / 정비센터 관계자 3,000만원